

# ‘중도개혁’ 표방 김진표 어떤 색깔낼까?

‘좌클릭’ 속도 한나라와 정책차별화 고심

민주당 정체성 우선 당내 노선갈등 일축

‘중도개혁’을 표방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앞으로 설정할 정책적 좌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좌클릭’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본격화될 여야간 정책 경쟁에서 여권과 어떻게 차별성을 드러낼지가 김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당 일각에서는 운간파인 김 원내대표의 중도개혁 노선으로 자자 야당의 선명성이 허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김 원내대표의 고민거리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16일 KBS 등 일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과 서민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 무엇인지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중도 개혁 내지 중도진보 노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각의 우려에도 ‘김진표’ 만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꼽고, 기존 ‘3+1’(부상교육·의료·보육+반값 등록금)에 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 확대와 주거·일자리·노인 복지를 추가해 정책적 완결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쩍 복지에 관심을 쓰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는 ‘실천력’과 ‘신뢰성’으로 돌파한다는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법안을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줄여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지원해 지방재정을 살리는 노력이 절실히”며 “이를 위해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약 6조원 가량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 진보적 색채를 강조하고 있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애권연합 등을 위해 진보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보여 노선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좌 클릭이나 우 클릭이나 불필요하게 당의 분열을 유발, 당력을 분산시킬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 “국가와 국가리더십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나아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달 말까지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에선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이 급

하다”며 “오는 30일 비대위 회의 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와 관련된 당헌·당규로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전당원 투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대변인은 “최종 의결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

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28일 의원총회, 24일 국회의원·당협 위원장 연선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추구하고 안 되면 비대위 회의에서 재직위원과 반수로 의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한 당헌·당규 개정 및 공정제도 개혁 소위(위원장 김학승), 정치선진화 및 국정쇄신 소위(위원장 원유철), 비전 및 당 정체성 소위(위원장 김성조) 등 3개 소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소위에는 비대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참여가 가능하며, 각계 전문가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의화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전대는 동원선거, 대의원 표심의 왜곡이 나타났고, 과거 실시했던 23만명 투표는 불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행 방식과 전(全) 당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당협별로 20~30명의 대의원이 참여, 하루에 한 장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쇄신기틀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를 대폭 확대, 전 당원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범보수동맹 조짐… 야권단일화 절실”

전남대 특강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지 협화화를 위한 쇄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 방향에 대해선 “지지층 결속을 위해 진보노선을 강화하는 확고한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 중도층을 포괄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당대한 거시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 손에 취어 꾀부로 느끼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고리로 자유선진당 이희호 전 대표 등 범보수동맹 구축 가능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선 애권단일 후보로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고 혜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시되는 그는 이날 ‘2012년 대선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제목의 전남대 행정대학

원 특강에서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세력은 제별과 언론, 종교, 지식집단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넓고 강고한 보수대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름합이 최상책이지만 현실을 인정한다면 ‘소통합’ 또는 연합·연대를 통해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구동준이’(求同存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보직에 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진 인사들을 전면배치해야 한다”며 “정당구조와 이미

한나라 정용화 “비대위서 호남 대책 논의”



한나라당 정용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에서 호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표는 다른 지역의 3~4표가 된다. 다른 지역에 하는 노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시도당위원장이 모두 공석이고 사무처장도 임기가 만료된 상태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호남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호남의 1